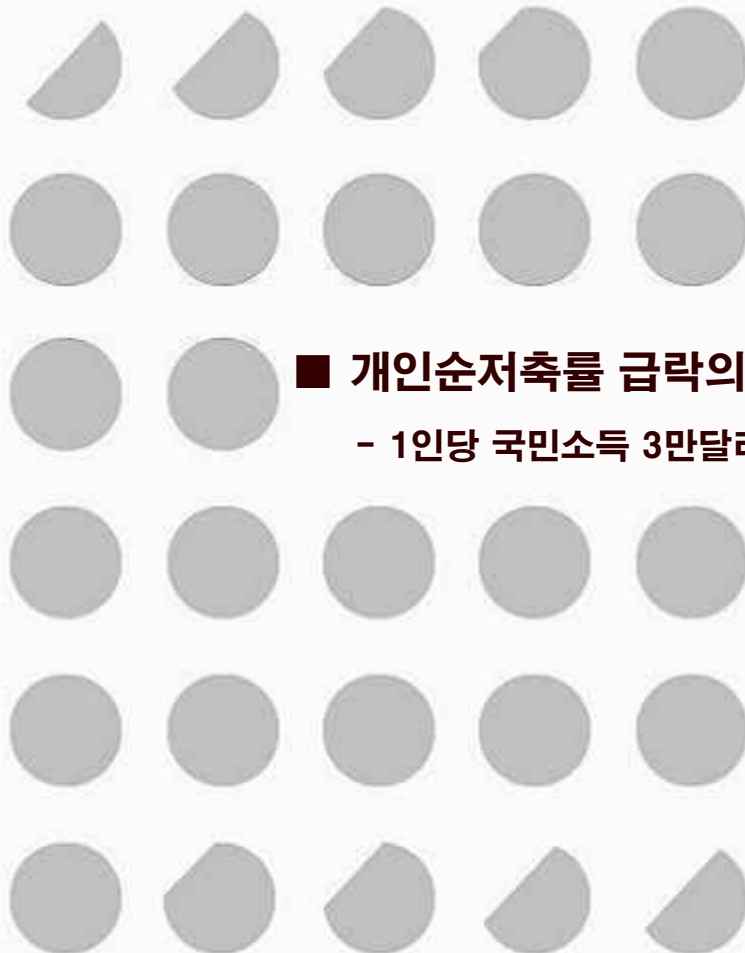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26~7.3)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개인순저축률 급락의 파장 -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어렵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개인순저축률 급락의 파장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어렵다

(현상)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회복되던 국내 개인순저축률이 2005년부터 다시 하락하면서 국가의 총저축률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개인순저축률은 2008년 말 현재 2.5%로 2000년 이후 OECD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시기의 개인저축률이 각각 7.5%, 9.5%, 13.0%인 점과 비교할 경우에도 너무 낮은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3만 달러 달성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인) 2005년 이후 개인순저축률 하락의 원인은 **소득측면**에서 **첫째**, 체감경기 악화이다. 이는 개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이고 있다. **둘째**, 소득양극화 심화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 청년층 실업난, 중장년층의 실질적 취업 악화 등에 따른 소득발생기간의 축소이다. 한편 **소비측면**에서 **첫째**, 부동산가격 상승이다. 이는 부의효과(wealth effect)를 통하여 소비를 자극하고,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늘려 저축여력을 줄이게 된다. **둘째**,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의 증가이다. 이는 가계의 사적 저축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해외과소비이다. 이 역시 국내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영향) 개인순저축률 하락은 **첫째**, 총고정투자율 저하와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져 성장률을 더욱 낮출 가능성이 높다. 개인순저축률 1%p 하락하면 총고정투자율은 연 후 0.37%p 하락하여 경제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지연시켜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 문제를 다시 제기시킬 수 있다. **셋째**,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문제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책) 향후 개인순저축률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반전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장기 하락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성공적인 3만 달러 시대를 위해서 중장기 저축률 제고가 시급한 바, **소득측면**에서 **첫째**, 국제경쟁력제고, 환율안정 등으로 교역조건을 개선하여 체감경기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본적인 소득양극화 문제 완화가 시급하다. **셋째**,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와 현재의 직능·직급별 일자리배분을 연령계층별로 세분화해 중장년층 일자리를 개발하여 개인 소득발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한편 **소비측면**에서 **첫째**,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여 비소비지출 확대 추세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그동안 무리하게 지출했던 과시성 소비와 불필요한 소모성 해외소비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 개인순저축률 급락의 파장 >

개인순저축률 하락 반전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태 후 회복되던 국내 개인순저축률 2005년부터 하락 -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추세 - 주요국 1인당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시기에 비해 매우 낮음

최근의 개인순저축률 하락 원인	
소득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경기 악화 → 개인처분가능소득 축소 - 소득양극화 심화 → 저소득층의 저축여력 약화 - 소득발생기간 축소 → 개인들의 실질소득 창출 감소
소비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가격 상승 → 소비자극 및 서민 주거부담 증가 -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 → 가계의 사적 저축여력 축소 - 해외 과소비 → 국내 저축여력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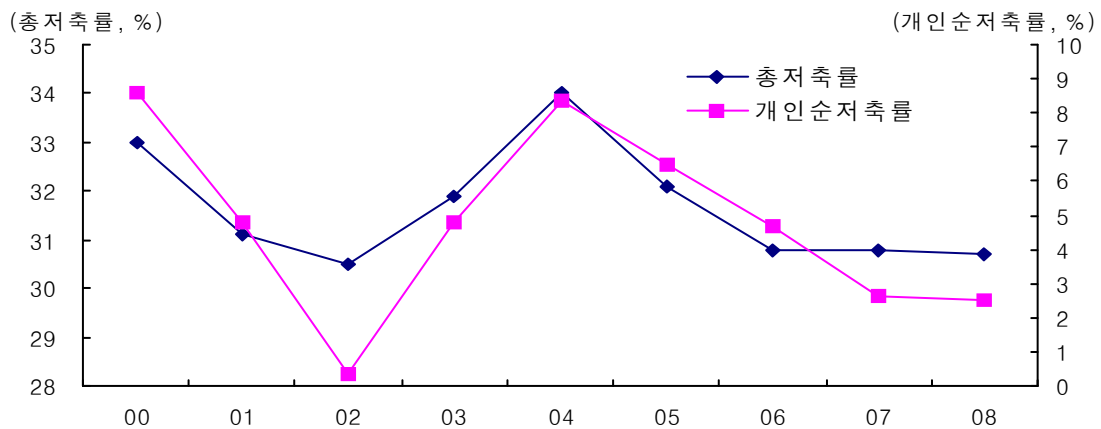
영향과 시사점	
영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고정투자율 저하와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 가계부채 문제 심화에 따른 신용불량 및 개인파산 확대 - 금융저축 감소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문제 확대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에 따른 개인순저축률 일시 상승 후 장기 하락추세 전망되는 바, 3만 달러 달성 성공을 위한 저축률 제고 시급 <p>(소득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쟁력 제고, 환율안정 등으로 교역조건 개선 · 교육훈련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층을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분 집중 양성, 현행 직능·직급별 직업의 연령별 재분류로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 <p>(소비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안정과 주택부담완화를 위한 부동산가격 안정 · 공적연금 보완을 위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확대 · 과시성 소비와 소모성 해외소비 축소

1. 국내 개인순저축률 하락 반전

○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회복되던 국내 개인순저축률이 2005년 이후 다시 하강 반전하면서 총저축률 하락을 견인하고 있음

-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잠시 상승하다가 2005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1990년대부터 이어지는 장기 하강추세를 지속
- 한국은행 발표 개인순저축률이 2002년 0.4%에서 2005년 6.5%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06년부터 다시 빠르게 하락
- 2008년 들어 개인순저축률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폭의 소비감소가 일어나면서 전년과 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2.54%를 기록
- 국내 개인순저축률은 1988년을 정점으로 장기 하강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총저축률과 개인순저축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개인순저축률(net personal saving ratio) :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과 연기금의 합으로 나눈 비율로 개인 부문의 저축 성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여기서 개인은 가계, 자영업자 등 민간 비법인기업,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

$$\text{개인순저축률} = \frac{\text{순저축}}{(\text{순조정 처분가능소득} + \text{연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

$$\text{순저축} = \text{순조정 처분가능소득} - \text{실제 최종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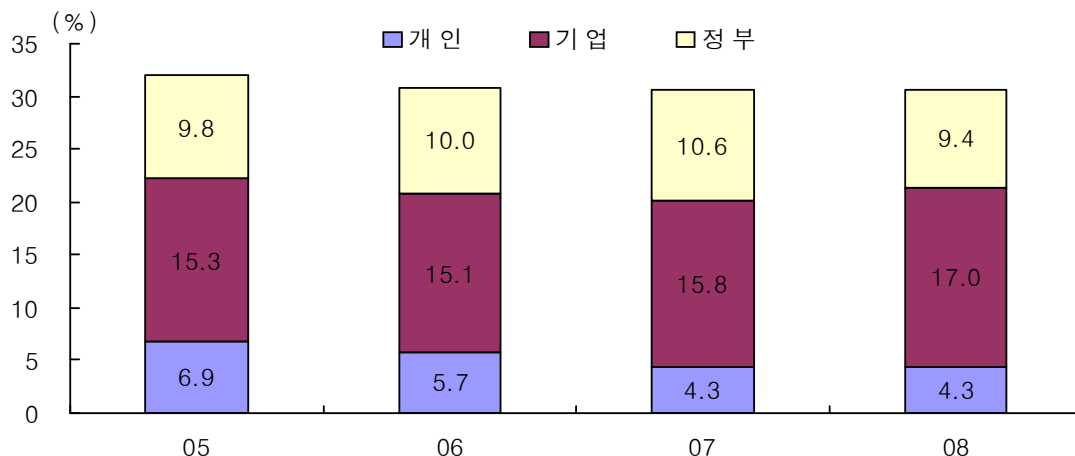
○ 이러한 국내 개인순저축률 하락은 총저축률 하락을 견인하고 있음¹⁾

- 2005년 이후 개인저축률 하락은 기업이나 정부의 저축률 보다 총저축률 하락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²⁾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저축률에서 각 경제주체의 저축률 변화를 보면 개인저축률은 6.9%에서 4.3%로 2.5%p 하락한 반면, 정부저축률은 0.4%p 하락에 그쳤고, 기업저축률은 오히려 1.7%p 상승

* '총저축률'은 국민경제가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구성에는 개인과 기업 등의 민간과 정부부분으로 구별 (총저축률에서 개인부분의 저축률은 개인순저축률과 계산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다름)

총저축률 = 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 - 최종소비지출)/국민총처분가능소득

< 경제주체별 총저축률 구성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 개인순저축률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시점의 저축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

- 1) '총저축률'은 국민경제가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 - 최종소비지출)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수치임.
- 2) 2000년 들어 개인순저축률은 기업이나 정부의 저축률보다 투자율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시현(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377호).

- 국내 개인순저축률 하락은 OECD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07년 현재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포르투갈 등이 마이너스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0.5%의 낮은 저축률을 기록
 - 국내 개인순저축률은 이외 국가들 보다는 현저히 낮으며, 2006년부터 일본 보다는 낮아진 상태
- 절대적인 수준도 낮지만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개인순저축률은 -8.2%p, 미국은 -1.9%p, 일본 5.8%p 하락한 반면 EU지역의 국가들은 오히려 0.4%p 상승

< 주요국 개인순저축률 추이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미국	2.4	1.8	2.5	2.4	2	0.4	0.8	0.5
EU지역	8.2	9.1	9.7	9.4	9.2	8.6	8.2	8.6
일본	8.9	5.2	5.1	3.9	3.6	3.8	3	3.1
한국	10.7	6.4	2.2	3.9	6.3	4.7	3.4	2.5

자료 : OECD.

- 현재 개인순저축률 하락추세가 지속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목표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주요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시기의 개인순저축률은 우리의 2.5~2.6%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태

< 주요국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시기의 개인순저축률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델란드	한국
2만 달러 달성 연도	1988	1988	1990	1987	1996	1991	2007
달성 당시 개인순저축률	7.5%	9.5% (1996)	9.2%	13% (1991)	17.9%	14.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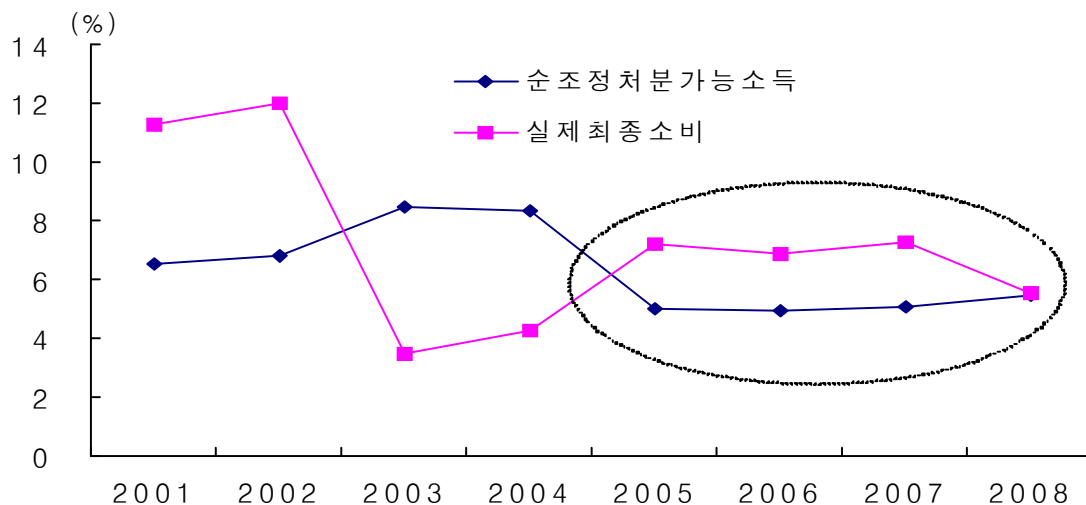
자료 : OECD.

2. 최근의 개인순저축률 하락 원인

○ 본고에서는 2005년 이후의 개인순저축률 하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경에 나타난 국내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를 분석함

-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될수록 요소생산성 하락, 인구고령화 등으로 저축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 이외에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비 등이 개인순저축률의 장기 하락 추세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5년 거주자 최종소비지출비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6.2%, 미국 2.6%, 일본 2.2%, 영국 1.4% 등 (OECD)
- 2005년 이후의 개인순저축률 하락의 원인은 처분가능소득 감소와 실제 최종 소비 증가 등 소득과 소비 측면 모두에 기인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소득증가율이 하락하고, 소비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약 2%p 상회
 -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개인들의 소비심리 악화로 실제 최종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 실제최종소비 증가율과 순조정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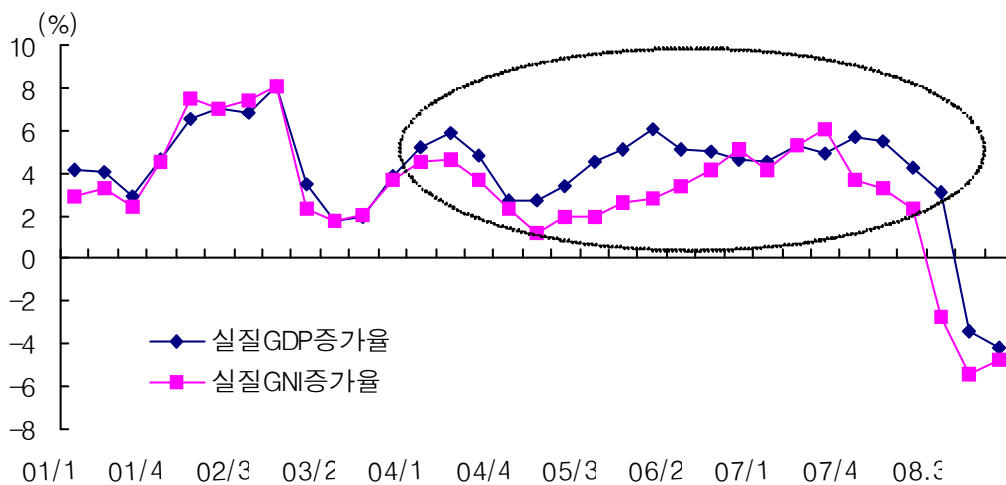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1) 소득 측면

① 체감경기 악화

- 카드사태 이후 지표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급속 악화
 - 2006년 1분기의 경우 지표경기를 나타내는 전년동기대비 실질 GDP증가율이 6.1%를 기록하였지만 지표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GNI 증가율은 2.1%에 그치는 등 체감경기는 상당기간 악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양 지표 모두 급락
 - * GNI(국민총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며 지표경제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과 달리 국민들의 체감지표로 사용. 특히 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연앙인구(年央人口, Mid-year estimated population, 7월 1일 시점)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 환율 적용)로도 표시
- 체감경기 악화는 개인들의 처분가능 소득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저축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국민계정에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GNI 변화와 연동

<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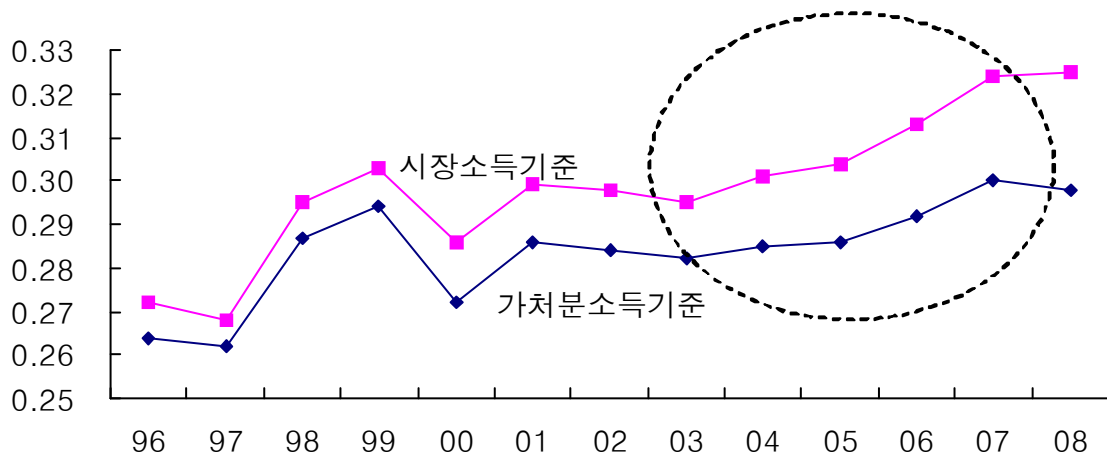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② 소득양극화 심화

- 국내 도시가구(2인 이상)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직후 안정 개선되다가 2005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
 - 외환위기 직전 0.26~0.27 수준에 머물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직후 0.29~0.31 수준으로 급등하였다가 이후 정부의 서민대책 등으로 안정세
 - 2004년 이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기준으로는 0.32 수준까지, 정부의 소득분배효과를 고려한 가처분소득기준의 경우 0.29수준으로 빠르게 상승
 - 2008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산가치의 급락 효과가 반영되어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에 그침
- 2005년 이후 소득양극화 현상 심화는 소비가 비교적 일정한 가운데 전체적인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려 개인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짐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증가율에 비해 소비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도 저축률 하락에 기인
 - 그리고 누진세 제도 하에서 고소득층의 세금은 늘어나 가처분소득은 줄어 들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평균 가처분소득이 떨어짐
 - 1994년 이후 지니계수(가처분소득기준)와 개인저축률하락 간의 상관관계가 0.97로 나타남

<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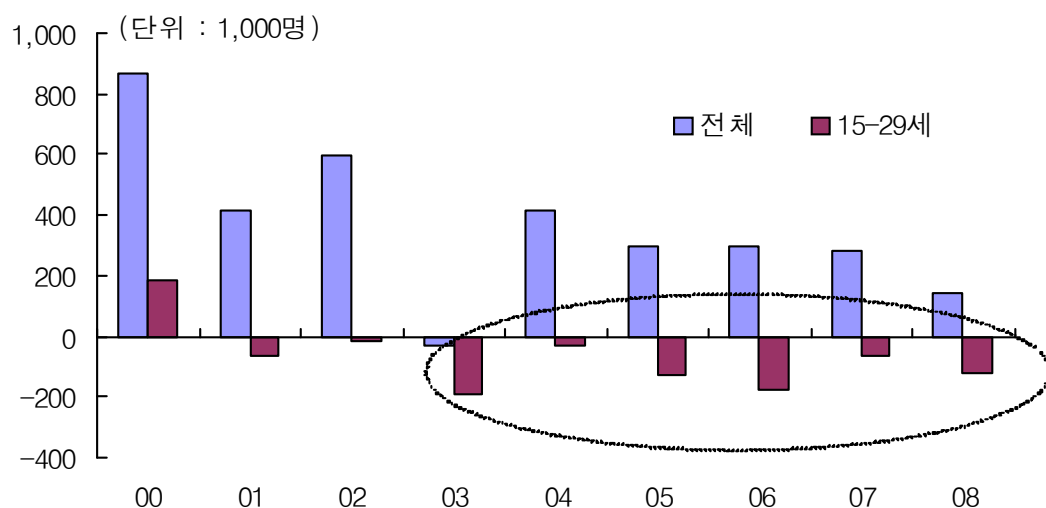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③ 소득발생 기간의 축소

- 2003년 이후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15~29세의 취업자는 줄어들었고, 중장년층의 실질적 취업이 크게 줄어진 것으로 판단
 - 전체 취업자 수는 2000년 2천 115.6만 명에서 2008년 2천 357.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15~29세 취업자의 경우 2000년 487.9만 명에서 2008년 408.0만 명으로 축소, 특히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취업자 수가 빠르게 줄음
 -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또는 권고 퇴직 등으로 4~50대 장년층의 실질적 실업도 증대된 것으로 판단

- 청년실업 증가, 조기퇴직 등에 따른 소득발생 기간의 축소가 개인의 실질소득 창출을 감소시키면서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본격 퇴직시점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현재 47 ~ 55세)의 퇴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일반적으로 소비는 소득만큼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발생 기간 축소로 인한 소득감소 현상은 저축을 떨어뜨리게 됨(생애주기가설, lifetime income hypothesis)

< 국내 취업자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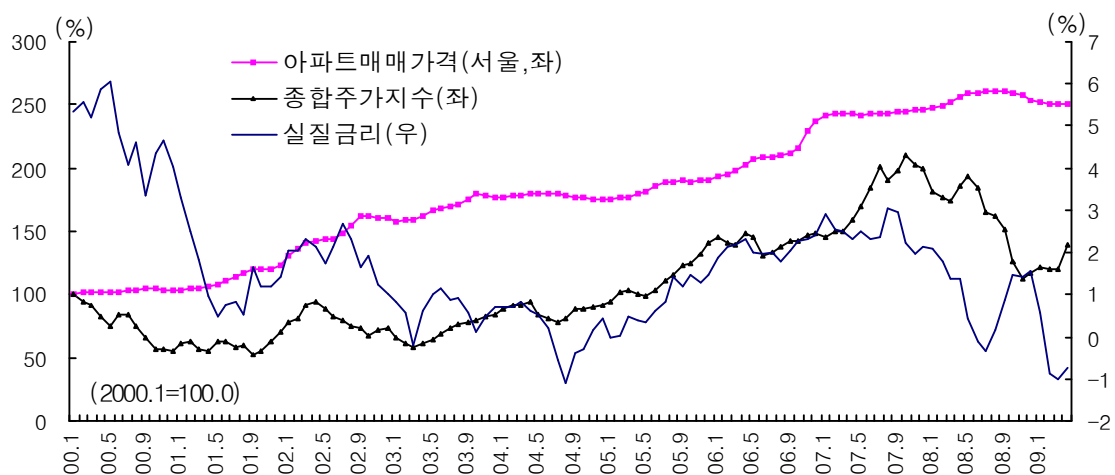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소비측면

① 자산가치 상승

- 실질금리 하락과 소비자금융확대로 인하여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급등
 - 2000년 이후 초저금리기조 하에서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2~2%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저축하기보다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소득 효과 증가로 전통적인 실질금리의 영향을 찾기 어려움³⁾
 - 뿐만 아니라 소비자금융 발달과 이자부담 하락으로 인해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가계가 부동산 자산 구입을 위해 금융자산을 소진하고 금융부채를 적극 활용
- 자산 가격 상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하여 소비를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저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보유자산의 담보가치를 높임으로써 대출여력을 확대(balance sheet effect) 등을 통한 소비 증가

< 실질금리와 자산가격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민은행.

주 : 실질금리 = 은행 정기예금 금리 -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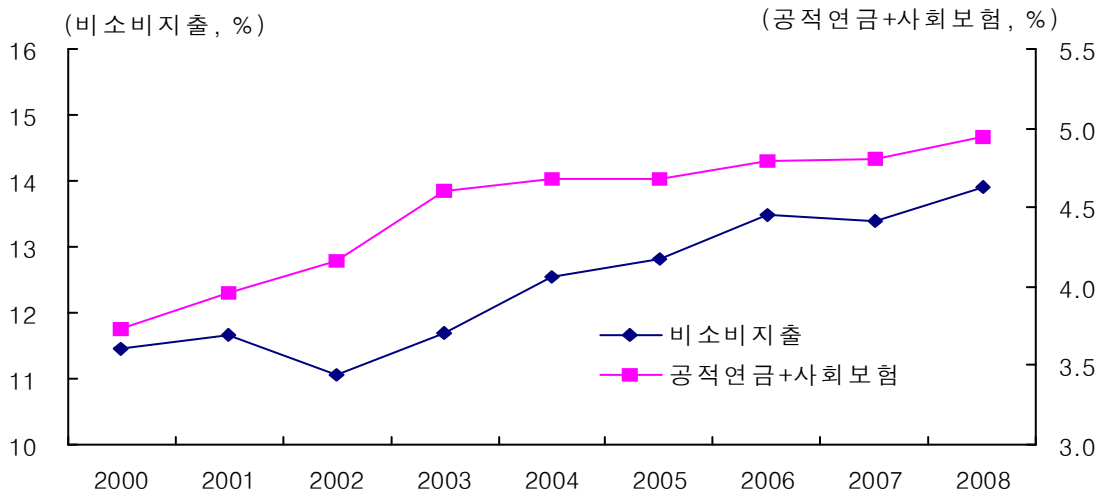
- 3) 일반적으로 실질금리 상승은 대체효과(저축증대)와 소득효과(저축감소)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저축률의 방향이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체효과가 커 저축증대 요인으로 여겨져 왔음.

② 비소비지출의 증가

- 2002년 이후 공적연금 증가 등에 의해 비소비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함
 - 공적연금 확대는 개인의 저축유인의 감소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님 (국민 연금의 도입시점(1988)이 저축률이 정점을 기록한 시기와 일치하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1999년) 이후부터 저축률이 10% 이하로 하락)⁴⁾
 - 가계소득 대비 ‘공적연금+사회보험’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08년 4.9%로 상승하고, 이를 포함한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1.5%에서 13.9%로 상승

- 공적저축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의료보험 등의 비소비지출의 확대가 가계의 사적 저축을 일정부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특히 공적연금이 가계저축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왔으며, 고소득층 보다 공적연금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저축유인을 보다 악화시키면서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

< 비소비지출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1) 도시근로자 가구.

2) 비소비지출에는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소득,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을 포함.

4) 공적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 공무원연금가입자, 사립교직원연금가입자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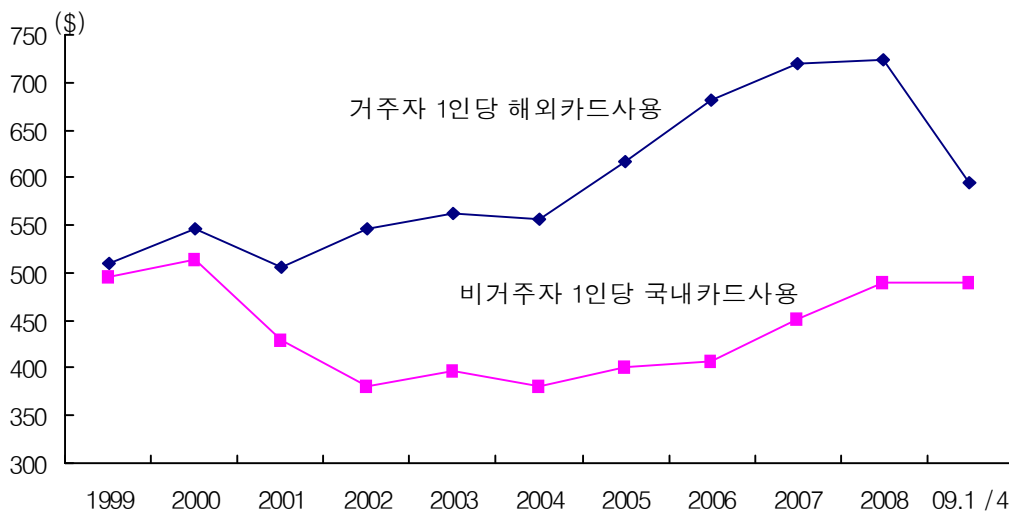
③ 해외 과소비

- 2005년부터 고평가된 원화를 기반으로 한 해외과소비가 2007년까지 심화
 - 2008년 여름까지 고급차, 고가 가구, 위스키, 의류 등의 수입 급증
 - 직접 해외로 나가 골프투어, 관광여행, 명품구입 등의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기유학, 어학연수 등 해외교육도 성행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출국자수는 매년 100만 명 이상씩 급증

-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도 2007년까지 연 30% 급증세
 - 2000년만 해도 비슷했던 거주자 1인당 해외카드 사용금액과 비거주자 1인당 국내 카드사용 금액이 2007년에는 719달러와 451달러로 크게 확대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카드 실적 급락

-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해외과소비는 소비를 증대시키면서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해외 과소비가 가장 극심하였던 2007년 거주자의 해외소비지출 증가율은 2~3% 수준의 국내소비지출 증가율 보다 무려 6~7배 수준

< 거주자 해외카드 사용 실적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3. 개인순저축률 하락의 경제적 영향

○ 개인순저축률 하락은 국가 총저축률 하락과 경상수지 악화를 견인하여 견조한 경기회복과 잠재성장률 상승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순저축률 하락은 총고정투자, 경상수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개인순저축률 1%p 하락하면 총고정투자율은 대략 0.27%p, 2년 후에는 0.37%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⁵⁾
- 저축률과 총고정투자율 간의 상관관계가 2000년 이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개인순저축률과 총고정투자율 간의 관계는 매우 높은 0.895로 나타남
- 1975~2007년 기간에 대하여 VAR 충격반응을 분석한 결과 개인순저축률 하락은 경상수지(순수출)를 약 2년 동안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축률과 총고정투자율의 상관관계 >

	총저축률	개인순저축률
1970 ~ 2006	0.518	0.518
2000 ~ 2007	0.622	0.895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377호(2009.4)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변수간 관계 분석' 참조.

- 개인순저축률 하락에 따른 투자 저하, 경상수지도 악화 등이 증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려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 1975~2007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VAR 충격반응을 분석한 결과 개인저축률 하락은 2~3년차에 경제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순저축률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는 1970~2007년 0.242, 2000~2007년 0.426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5) 한국은행의 분석에서는 개인순저축률 상승이 총고정투자율을 0.27%p, 2년 후에는 0.37%p 상승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여기서는 개인순저축률 하락의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역으로 표현함.

○ 개인순저축률 하락은 갈수록 악화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지연시켜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음

- 개인순저축률 하락에 따른 가계저축 위축은 가계의 재무구조가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보임
 - 국내 가계의 자산은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의 형태인 반면 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닌 금융기관의 장단기부채(즉 금융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
 - 주택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쉽게 전이되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하여 금융자산 매각, 개인파산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 등을 양산시킬 수 있음
 - 실물자산이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상태로 빠지면서 개인파산 신청이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

○ 개인순저축률 하락은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문제를 대두시킴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회구조가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노후보장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 한국의 부양인구 비율(20~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름
 - 사회적으로 안전망도 확고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직장의 안정감은 현저히 떨어져 있고, 가족의 부양 특히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어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만 있음
 -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자산소득(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공적이전 (공적연금, 생활보호 등) 등으로 구분되나, 이러한 소득원 모두 불투명한 상태

-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저축률의 하락으로 인해 현재의 경제활동인구는 은퇴시점에서 생활수준의 급격한 둔화를 경험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노후생활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적정 저축률이 36세 기준의 경우 21%, 45세 기준으로 15.4% 매우 계산된 것으로 보면 현재의 개인저축률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⁶⁾

< 한국인의 적정 저축률 >

		36세 표본		45세 표본	
		물가상승률(4%)	물가상승률(6%)	물가상승률(4%)	물가상승률(6%)
공적 연금	4,000만원	21.0%	21.5%	15.4%	15.4%
	2,000만원	23.8%	27.0%	19.3%	23.9%
	0	28.6%	32.6%	29.2%	34.9%

자료 : 한국 FP학회 2008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

주 : 주택자산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의 투자수익률을 7%로 가정.

4. 시사점

○ 향후 개인순저축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반전할 수 있지만 다시 장기 하락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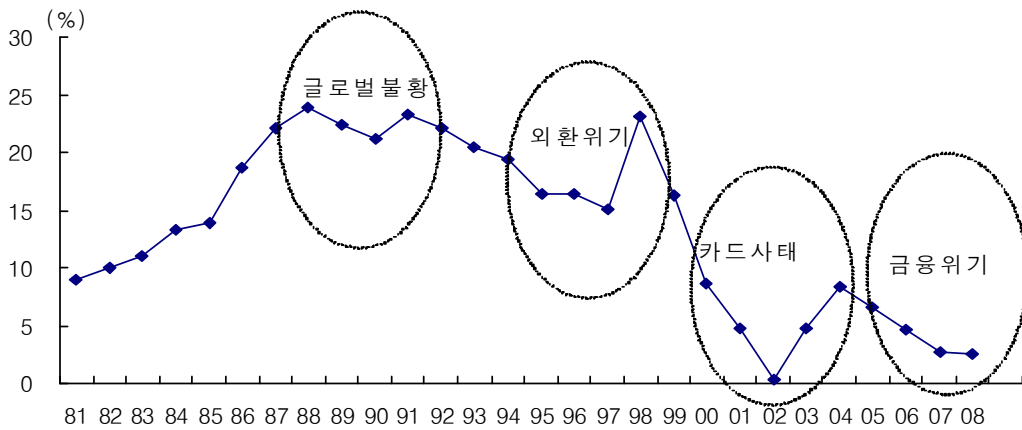
- 국내 개인순저축률은 1988년 23.9%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통상 위기를 맞이하면서 재차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
- 과거 개인순저축률 하락 추세에서 1990년 글로벌불황,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등을 맞았고, 이 같은 위기 직후 소비 급락으로 급반등했다가 또 다시 하락하면서 장기 하강 추세를 지속

- 국내 개인순저축률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소멸될 경우 선진국가가 겪고 있는 하락속도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락될 가능성이 높음

6)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한국의 정서상 주택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유산으로 생각과 자산가치의 불안정 등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2009년 개인순저축률은 다소 개선될 전망
- 하지만 앞서 본 소비감소, 양극화완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강화 소비 감소 사회경제적 추세가 이어질 경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다시 장기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

< 국내 개인순저축률 장기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개인순저축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국가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개인 경제의 노후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도록 앞서 본 하락요인을 개선한 중장기 저축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함

(소득 측면)

- 교역조건을 개선하여 개인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를 상승시킬 필요
 - 경쟁력제고, 환율 안정 등으로 국내 수출품의 상대가격을 안정시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필요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 GDI(GDP+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국외순수취요소소득+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경기와 관계없이 더해가는 소득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가 시급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지원보다도 교육훈련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시킬 필요

-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등 기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회복이 시급
-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에게 각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하여 소득 발생의 기간을 연장시켜야 할 것임
 -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
 - 현재의 직능·직급별 일자리배분을 연령 계층별로 세분화(즉, 경험과 숙련이 요구되는 노령 층 일자리와 순발력과 활동성이 필요한 젊은 층 일자리로 세분)해 중장년층 세대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

(소비 측면)

-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 부동산가격 상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인하여 소비증대로 이어지며, 반면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축을 줄이는 경향이 높음
 -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때 이들의 저축률은 정상화될 수 있음
- 2002년 이후의 비소비지출 부분의 확대 추세를 안정시킬 필요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공적연금 제도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도 있지만,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하여 공적연금을 보완도 매우 시급
 - 뿐만 아니라 각종 불요불급한 비소비지출을 줄여 개인들의 저축여력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
-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즐겼던 과시성 소비와 소모성 해외소비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가능한 한 줄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노력
 - 항상 자신의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생활 습성을 기르고, 신용사용 후 제때에 대출 원리금 및 구매대금을 상환해야 할 것임
 -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게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분야 개발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3669-4009)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E)
				1/4	2/4	3/4	4/4	1/4	
미국	2.8	2.0	1.1	0.9	2.8	-0.5	-6.3	-5.7	-2.8
EU	2.9	2.7	0.8	0.6	-0.2	-0.2	-1.6	-2.5	-4.2
일본	2.0	2.3	-0.7	1.4	-3.5	-2.5	-14.4	-14.2	-6.2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6.7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4.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4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2009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말	6월 26일	7월 3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3.97	2.21	2.66	3.53	3.49	-0.04%p
	엔/달러	112.58	106.27	90.22	97.34	95.38	95.97	0.59¥
	달러/유로	1.4722	1.5785	1.4125	1.3190	1.4049	1.3958	-0.0091\$
	다우존스지수	13,265	11,350	8,776	7,609	8,438	8,281	-157p
	닛케이지수	15,380	13,481	8,860	8,110	9,783	9,876	9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5.90	3.41	3.94	4.12	4.04	-0.08%p
	원/달러	936.1	1,046.0	1,259.5	1,383.5	1,285.8	1266.0	-19.8원
	코스피지수	1,897.1	1,674.9	1,124.5	1,206.3	1,388.5	1420.4	31.9p

주 : 7월 3일 해외 지표는 전일(7월 2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말	2008년		2009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말	6월 26일	7월 3일		
국제 유가	WTI	95.97	140.03	44.61	49.65	69.39	67.02	-2.37\$
	Dubai	89.30	136.16	36.45	46.80	70.80	67.98	-2.82\$
CRB선물지수	358.71	462.74	229.54	220.40	251.31	245.86	-5.4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